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야 구분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춘천-철원-화천 양구 갑 춘천-철원-화천 양구 을 원주 갑 원주 을 강릉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양양-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당선자 허영 국회의원 당선자 한기호 국회의원 당선자 이광희 국회의원 당선자 송기현 국회의원 당선자 권성동 국회의원 당선자 이철규 국회의원 당선자 이영수 국회의원 당선자 유상범

군수



강릉군수 양천자 장신상 고성군수 양천자 함영준

CAK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 의회사무처

“일감부족 심각 SOC사업 확대·발굴 절실”

건설업계 21대 국회에 바란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극심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지역 건설업계가 21대 국회의 추진 과제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제시했다.

종합·전문건설업계는 업황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공사물량 확대'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건설사업이 위축되면서 지역업체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았다”며 “향후 진행될 추경에서도

SOC투자 예산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경춘국도 등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인프라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계는 지역업체들의 의무화도급비율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기·기계설비건설업계는 분리발주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주문했다.

강진원 한국전기공사협회 도회장은 “전기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사

항으로 법제화돼 있는 데도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분리발주 미이행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기계설비업계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경식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도회장은 “지역업체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한기호**



원주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이광재**



원주을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송기현**



강릉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권성동**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이철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이양수**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유상범**



횡성군수
당선자 **장신상**



고성군수
당선자 **함명준**

군수

영광스러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강원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CAK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 외 회원일동

“산업계 코로나 백신’ 건설산업 투자로 경제위기 극복”

CAK 코로나19확산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는 물론 지역 산업 전반에서 위기가 고조됐다. 신속한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고용 창출 능력이 높고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게 퍼질 수 있는 건설 투자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은 2018년 기준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액 46조9819억9600만원 중 3조8660억5600만원(8.2%)을 차지해 제조업(4조5208억7800만원)과 함께 강원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다. 건설업은 고용유발계수 10.2, 취업유발계수 13.9로 고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제21대 국회에 입성할 4·15 총선 당선인들에게 건설산업을 ‘산업계의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 경제 위기 극복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SOC건설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생활형 SOC 사업을 기반으로 확대됐다. 정부와 국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돌파구로 건설산업을 짚은 만큼 건설업계는 SOC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총선 후 논의될 추가경정예산에서도 SOC 예산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민간 건축시장마저 위축되어 있는 만큼 각종 규제를 철폐해 민간 자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민간 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강원 건설업계의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제2경춘국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생활형 SOC 확대 건의



전통시장 장보기



대통령 오찬간담회 참석



건설협회 유관기관 협력

건설협회 도회 총선 당선인에 당부
건설업 연관산업 파급효과 강조
고용창출 능력·경기부양 주목
SOC 예산 추경 편성 포함 요구
주요 인프라사업 국회 추진 주문
적정공사비 보장 관련 법령 조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철도 등 도내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 계속 공사의 연차별 예산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춘천~철원 고속도로,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강릉~제천 간 동해선 철도 연결 등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인프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 주문할 계획이다.
■적정 공사비 확보 및 간접비 지급 법제화
최근 건설산업의 최대 화두는 적정 공사비 확보다. 적정 공사비는 건설 사업자의 이윤 보장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로 직결되는 문제다. 적정한 공사비가 보장돼 저가입찰 방지 등 공공공사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저가하도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4·15 총선 당선인들에게도 계약법령의 예정 낙찰률 또는 저가심사 기준 조정 등을 통해 낙찰률 상향을 이끌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공사기간 지연 사유가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에 투입된 간접비용을 발주기관이 지급해 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계약법을 개정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제2경춘국도 사업 등에 도내 건설업체가 4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회는 이를 계기로 향후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에는 이 제도를 지난 2013년 폐지화한 만큼 국가계약법에 도 제도를 도입해 중소 건설업체 육성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과제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0일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63개 과제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근절 및 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도시공간 재창조의 다섯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연 25조원 이상의 SOC 예산 확충, 노후 인프라의 BTL 민간제안 허용 등 인프라 투자확충 방안을 포함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포함한 과도한 현장 규제 정비,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 신설 등 공정 경제 구축,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면적 확대를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건설현장의 맞춤형 규제혁신부 터 미래 혁신성장까지 망라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IMF 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거대한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에 건설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에도 건설업계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회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당선인들이 힘써달라”며 “강원지역은 건설업이 제1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생활형 SOC 사업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소담